

# 한 입으로 두말하는 장관의 비애

## 경제포커스



나지홍  
경제부장

정부가 반대해온 공매도 금지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같은 정책이 정치권의 요구로 잇따라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양도세를 몰아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 조치는 발표 9일 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주경호 부총리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심지어 공매도 금지 발표 이틀 전까지 주주 부채인 금융위원회가 부인했었다. 정부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갉아먹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념에 치우친 소독 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같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었던 것도 역설적이지만 일머리가 있는 공무원들 덕분이었다. 만일 공무원이 자기 신념과 다르다고 해서 선출 권력의 정책을 거부한다면 국정 운영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신 공무원은 정책이 잘못되더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정책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이 진다.

하지만 영혼 없는 공무원은 말처럼 쉽지 않다. 공무원이 기계가 아니라 감

영혼 없는 공무원의 상징된 대주주 양도세와 공매도 금지 정책 따르는 게 관료 숙명이지만 정책 바꿀 땐 담당자도 교체해야

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거쳐 장관으로 퇴직한 한 전직 관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정책을 맡다 보면 본인 생각을 정책에 일치시키게 된다”며 “내 생각과 다른 정책을 맡게 되면 괴로워서 견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올라가지 않아요”라고 했다.

소신과 행동이 따로 놀아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괴로움(인지부조화)을 피하려는 성향은 인간 본성에 가깝다.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바꿀 때가 관행화돼 왔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외치던 관료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분배 우선으로 돌아서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처럼 정권은 그대로인데 정책이 바뀌는 경우다.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부총리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여당의 선심성 정책에 반대했지만, 이번엔 지지 않는다. 정책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이 진다.

관가에서는 “그나마 대주주 양도세 기준 반복이 공매도 금지보다는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복을 결정한 주체가 부총리 후임인 최상목 후보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추 부총리가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공매도 결정을 뒤집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걸고 맞섰어야 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와 다를 게 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이번 개각에서 제외되면서 졸지에 ‘한 입 갖고 두말하는 장관’이 돼버린 셈이다.

장관의 불명예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정부 부처를 떠나 민간으로 옮긴 엘리트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장관 돼봐야 좋은 게 뭐 있다. 정치인들 시다바리(보조 역할)만 하지”였다. 공무원들의 명예를 경시하는 정치권이 귀담아들어야 한다.

## 김준의 맛과 섬 [170]

### 청산도 구들장논

연말 선물이 도착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쌀과 메밀, 유채 기름 그리고 돌미역 등이 곱게 포장되어 있다. 쌀과 메밀과 유채 기름은 금년에 구들장논에서 수확한 것이고, 돌미역은 청산도 갯바위에서 채취한 것이다. 지난해 약간의 후원비를 내고 구들장논 오너로 참여했더니 보내온 것이다. 구들장논은 청산도의 상징이며,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섬 문화다.

지를 베어 축분이나 인분을 섞어 밭으로 시킨 퇴비를 사용했다. 매년 이렇게 반복해야 귀한 물을 붙잡고 양분을 공급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구들장논은 산뽕, 논, 주머니, 갯벌, 바다로 이어지는 자연 지형에 순응한 전형적인 섬마을의 경관을 보여준다. 또 통수로로 이용해 위 논과 아래 논을 잇는 관계 시스템과 수로에 서식하는 갯지렁이, 갯벌, 양서류 등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기능을 한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이듬해 국내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 구들장논은 청산도의 상서리와 부흥리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청계리와 도청리와 양지리 등에도 다수 남아 있다.

구들장논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고



명화해 휴경지가 계속 늘어나자, 구들장논보전회는 “오너제”를 도입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구들장논을 보전하고 있다. 오너제란 도시민의 후원을 받아 경작 활동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소비자가 공동 생산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구들장논 보전회는 10여 년 전에 논 소유주와 관련 청산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협동조합 ‘구들장논보전드레’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보리, 메밀, 유채 등 경관 작물을 식재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구들장논 오너가 되면 모심기, 수확, 구들장논 소풍, 청산도 여행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한 위원장, ‘초현실적 민주당’ 못지않은 정부·여당 직시해야 성공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오직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불출마 선언부터 한 것은 기존 정치권의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는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라고도 했다. 정치권의 구태에 환멸을 느껴온 국민 입장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게도 한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람만 공천하겠다”고 했다.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출당시키겠다고 했다. 많은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도를 넘은 각종 특혜를 없애는 것이 정치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단순히 불체포특권뿐 아니라 180여 가지에 달한다는 의원들의 수많은 특권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을 내놓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위원장은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팔 전 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며 정략적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그런 민주당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반성하자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것은 국민이 민주당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뭔지 국민도 알고 한 위원장도 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초현실적’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임기 1년 반 만에 여당 대표 2명이 쫓겨나 세 번째 비대위가 출범하고, 대통령 부인 특권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된 것도 전례 없던 일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으니 국민이 답답해하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특권 거부권만 행사한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사극에 나올 법한 암투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우리는 우리 일,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다. 실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검사 시절과 같은 부하 관계인지, 아니면 해야 할 말은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이기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한 위원장의 취임사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들이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 유엔 “중국 내 탈북민 처우 개선하라”, 한국도 목소리 내야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이들이 받는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다. 탈북자 강제 복송을 자제하라는 권고와 같다.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몇 년 간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침묵해온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지난 10월 구금 중인 탈북자 수백 명을 기습 복송한 중국의 야만적 행태에 국제사회가 공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이것이 유엔의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이 같은 입장을 담았다. 인권이사회는 유엔 회원국 193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제도(UPR)를 운영하는데, 내년 1월 중국에 대한 UPR을 앞두고 난민 문제를 총괄하는 UNHCR의 의견을 받은 것이다. UPR은 해당국의 인권 문제를 조망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인권 단체들과 서방 인권 선진국들의 관심이 높다. 이번 중국 UPR을 앞두고 전 세계

인권 단체 162곳에서 중국에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것도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UPR에서 발언권을 갖고 질의·권고를 할 수 있다. UPR 당일 허용되는 발언 시간은 1분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전 질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보다도 이번 UPR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나라가 한국이다. 2018년 중국에 대한 UPR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 당사국도 아닌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정부가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한다.

탈북자는 거의 대부분 굶주림과 못해 탈출한 사람들이다. 복송되면 가혹한 폭행, 고문,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난민이다. 중국은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인데도 탈북민을 강제 복송한다. 이런 반인도적, 반문명적 행태를 저지하려면 국제사회와 연대해 중국이 어떤 국가란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 중국도 국제사회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하루빨리 주택대출로도 확대해야

신용대출자가 더 큰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정부가 지난 5월 구축한 이후 7개월 만에 10만여 명의 대출자가 2조3000억원대 신용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들은 금리를 평균 1.6%포인트 낮췄고, 400억원어치 이자를 절감했다. 1인당 평균 36만원꼴이다. 전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민생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연내에 대한대출 대상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으로 미뤘다. 특정 은행으로의 자금 풀림 가능성 등이 이유라 하지만 고금리에 허덕이는 취약계층 저지를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확대 시행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600만원 수준이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억3000만원, 1억

9900만원에 이른다. 전세 주택담보대출액은 1018조원에 달하고, 전세대출액도 170조원에 이른다. 대한대출을 통해 평균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내려가도 연간 12조원의 이자를 절감하고, 1인당 평균 130만~2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특정 은행으로의 자금 풀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은행권 총 대출대출 한도, 은행별 대한대출 한도를 각각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대한대출 한도를 설정할 경우 금리 경쟁 촉진 효과가 제한되고, 가계의 대출이자 경감이란 정책 목표도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은행들은 과점 체제에 안주하면서 금리 경쟁을 회피하며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쫓아왔다.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이자수익이 60조원에 육박한다. 오죽하면 은행에 ‘황제세’를 물리지 않는 말까지 나오겠나. 금리 경쟁 촉진을 통한 대출이자 경감이란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좀 더 과감한 대한대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한동훈호, 내부총질꾼·기회주의의 언론과 타협 말라

뉴데일리 newdaily.co.kr

안팎의 전선... 밖으로 586 극좌 전체주의, 안에선 내부 총질 기회주의 | 지난 대선 이준석과 그 멘토들 분탕질 잊었는가?

## 대한민국 운영에 관한 6개의 권고

12월 29일 출범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부한다.

### (1)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하라.

국민의힘 당풍(黨風)은 [개혁보수]란 그럴싸한 포장지로 분식(粉飾)한 기회주의의 기득권 문화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구태의연 + 탐욕 + 노후(老朽)]를 철저히 청산하라. 21세기 AI 시대 [선진 한국인]의 정당으로 거듭나라.

### (2) 이 혁신을 위해 [한동훈 비대위]는 어떤 종류의 탁(濁)한 기득권으로부터도 벗어나 있어야 한다.

- ★ 수구 좌파 기득권
- ★ 기회주의·강남좌파 기득권
- ★ 각계 이권 카르텔
- ★ 가짜 뉴스 제작·유포 집단의 탓에 걸려들어서 안된다.

### (3) 열린 사회, 그리고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을.

[한동훈 국민의힘]은 칼 포퍼가 그의 저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말한 각종 전체주의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 그러면서, 정책 수준에선 [민생 취약 부]에 개별한 방침을 짰으면 한다.

### (4) 공천권 등 전권을 행사하라.

철저한 혁신을 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공천위원, 총선 후보감들을 발탁하는 전권(全權)을 행사해야 한다.

### (5) 싸울 줄 아는 [전사(戰士)] 집단을.

[뉴 국민의힘]은 웰빙 체질을 단호히 떨쳐버려야 한다. 제대로 싸울 줄 아는 레지스탕스(저항) 전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항할 것인가? 이 시대 [열린 사회의 적]인 [586 전체주의]에 저항해야 한다.

### (6) 자유 레지스탕스 전사란 누구인가?

체코 감독 데이비드 크로프가 만들고, 이스라엘 여배우 아델 주리가 주연한 <밀라다: 당신이 들려준 자유>란, 2017년도 영화가 있다. 2차 대전 전후에 불꽃같이 살았던 체코의 여성 투사 밀라다 호라코바를 그린 작품이다.

그녀는 나치 전체주의에도, 공산 전체주의에도 저항했다. 끝내 공산당의 모진 고문과 영타리 재판 끝에 처형당했다. 소련이 망한 후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밀라다 호라코바가 싸운 적이 바로, 자유 한국인들이 싸워야 할 적이기도 하다. [586 극좌 전체주의 + 바른 미래당 계열]이 그들이다.

### 만나고, 품고, 붙잡아 봐야 소용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들 어중간한 내부총질꾼(이준석, 김중민, 하태경, 김용, 유승민 등)을 ★ 만나라 ★ 품어라 ★ 붙잡아, 하는 언론들 말에도 절대로 귀 기울여선 안 된다.

꺾임 여론조사는 전한다. 2024 총선에서 수도권 유권자 절반 이상이 이재명 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하라 수도권, 나라가 그렇게 넘어가도 좋은가?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p>한동훈 비대위에게 권하는 책과 영화- &lt;열린 사회와 그 적들&gt; 과 &lt;밀라다&gt; [류근일 칼럼]</p>	<p>‘한동훈 비대위’에 당부한다-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하라 [류근일 칼럼]</p>
<p>김건희 특검? - 김경숙·김태경 특검부터 하라! [이양승 칼럼]</p>	<p>한동훈, ‘뉴국민’ 패기 등에 자신감 부여라- 세이렌의 유혹 이겨낼 오디세우스 처럼 [이양승 칼럼]</p>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2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